

헌재, 국민의힘 흔들기에도 '尹 탄핵 심판' 고삐 죄다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심판 오늘 결론...9인 체제 완성될 듯 4일 탄핵심판 심리 재개...6일부터 신속 심리 종일 재판 진행

헌법재판소(헌재)가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정치권의 재판관 정치편향 논란을 공개적으로 반박한데 이어 3일 예정대로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을 내린다. 이번 주 탄핵 관련 국회 측 증인들을 불러 심문을 진행하고 오는 6일부터는 신속 심리를 위해 종일 재판도 진행한다.

◇헌재 완성체 구성되나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3일 오후 2시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을 낸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타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판결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계-조한창 두 명의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를 제외한 것이 국회의 '헌재 구성 권한'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다.

헌재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면 최 대행은 마 후보를 재판관에 즉각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는 헌재가 국회 측 주장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인씩 임명하는 재판관 선출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국회가 '국회 몫 3인 재판관'을 선출한 것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재량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9인 재판관 체제가 완성된다. 결국 윤 대통령에 탄핵심리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의 논란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 측 일부 의원들은 헌재가 국회 손을 들어주더라도 즉각 마 후보를 임명할 필요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우익식 국회의장이 국회 명의로 낸 것을 문제 삼으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국회 표결을 통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헌재, '재판관 편향' 반박 =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일부 재판관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여년 전 SNS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교류한 사실부터 재판관 가족들의 정치적 성향까지 문제삼고 있다.

판사 시절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 대행이 2010년 자신의 트위터에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올린 글과 블로그 글 등을 도마에 올렸다.

이민서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은 사실도 거론하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서

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이 노골적으로 헌재 재판관 흔들기에 나서자 공보관 입을 빌어 공개적으로 반박한 셈이다. 문 대행도 지난달 29일 개인 SNS에 "원문을 읽어보라"며 당시 블로그 전문의 링크를 올렸다.

헌 공보관은 문 대행의 좌편향 논란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 대행은 페이스북 친구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여년 전 댓글과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면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확일,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헌 공보관은 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지, 그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면서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으로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빨라지는 탄핵심판 시계 = 헌재는 4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재개한다.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5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이날 국회 측 증인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법집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들 증인들은 비상계엄과 관련 윤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직접 전화통화 받아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헌재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만약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 윤 대통령의 대응도 주목된다. 이후 6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진행된다. 기존 오후 2시에 시작해 서너 시간가량 진행되던 재판 시간을 대폭 늘려 '집중 심리'를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2~3월 안에 심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헌재는 "증인신문이 많고 변론도 본격적으로 진행돼 시간을 늘리는 것"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오전과 오후 번갈아 총 17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한편, 헌재는 국회 신청 증인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채택했고,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웅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받아들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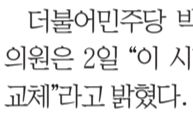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미임명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루 앞둔 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시대 최대 개혁과 혁신은 정권 교체”

박지원 국회의원, 광주 방문 기자 간담회

“민주당 호남만으로 안 되고 호남 배제해서도 안 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은 2일 “이 시대 최대 개혁과 혁신은 정권 교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내란 정당이 반성 없이 정권 재창출하겠다고 하는데, 100일 동안 개헌도 하고 국가 개조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지금 개헌 논의는 내란에 쓸

린 이목을 분산시키는 블랙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를 향해 총선 공천과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 발언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그런 논리라면 김 전 지사부터 나에게 대북 송금 특검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와 만났을 때 ‘포용과 통합’의 행보를 강조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민주당은) 호남만으로 안 되고 호남을 배제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이 대표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패배한 것을 언급하면서 “호남에서 이 대표 지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지해 주신 만큼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尹 내란재판’ 중앙지법 형사 25부 배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에 대한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등 사실상 전담재판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25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재판부는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균 전 대령 사건을 모두 배당받았다.

대법원 상규에 따르면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또 배당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사안 규모와 재판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사안의 통일적 판단과 심리 효율성 등을 고려해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이 다른 피고인들 사건과 병합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2월 6일 김 전 장관은 두 번째 공판준

비기일을 진행하고 같은 날 다른 4명에 대해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오후 2시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3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균 전 대령의 첫 준비기일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잇달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조 청장 등 내란 혐의의 사건들의 병합심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 배당을 기점으로 보석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재판부가 보석 심문을 먼저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